

#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 Online Series

2018. 05. 08. | CO 18-20

임강택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핵심 목표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창출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의 시장' 형성과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이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은 이제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의 출발점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에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당국은 조만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와 북한경제의 수요를 적절하게 결합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내용이 담긴 USB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네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양 정상 간의 신뢰구축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에서 원론적인 방향 제시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으며, 우리 측이 의도했던 것은 무엇이고, 북한 측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등이다.

## 남북정상회담과 경제협력

4·27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의 내용을 살펴보면, 1조에서 “남과 북은 ...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6항에서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여건이 마련될 경우 기존의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가자’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북한은 정상회담 직전인 4월 21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기존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완성을 선언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에서 경제사업을 우선시하고 경제발전에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서 북한이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활용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간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남북경협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문 대통령과의 비공식적인 담화 중에 북한의 열악한 도로상황에 대해서 재차 강조함으로써 북한지역 교통로의 개보수와 현대화를 위한 집중적인 투자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정도가 그나마 경제협력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측에서도 남북경협에 대해서 북측과 논의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 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의미와 특징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것들을 살펴보면 중요한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제기된 배경과 지향하는 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제기된 배경에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추세 지속과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잠재력 증대가 있다. 우리 경제는 10년 넘게 3만 달러 문턱을 넘지 못하였으며,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은 한반도경제권과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경제를 하나로 묶어서 북방대륙 경제로 진출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즉,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핵심 목표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공동으로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사실상의 통일을 달성하자는 구상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시장을 하나로 연결하고 통합의 수준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물적·인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셋째,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경제협력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적절한 수준의 성장과 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남과 북의 경제가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가 스스로 변화·발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남북 경제의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넷째,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 경제협력과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연계시켜 나감으로써 한반도경제가 북방으로 경제영역을 확충해 나가는 새로운 북방경제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남북의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남북 경제협력을 동북아지역 경제협력과 연계시켜 나감으로써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경제의 공동번영을 견인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주요 내용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하나의 시장’ 형성과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이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시장’은 남과 북이 시장 영역과 기능을 활용하여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시장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자는 것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목표이자 과정이며 핵심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시장이 남북경제통합 과정과 수단으로 지니고 있는 의미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 기업들이 북한 시장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고, 둘째, 한반도 경제권을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통합해 나가겠다는 것이며, 셋째, 남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삶을 함께 개선시켜 나가는 생활경제공동체를 추구하고 간다는 것이다. 넷째는 남북한을 넘어 동북아지역까지 시장을 통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남북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기업들이 북한과 교류하고 투자·협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3통문제의 실현을 포함하여

자율적인 노무관리가 가능해져야 하고 북한의 열악한 산업기반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남북한 시장연계를 위한 거점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우리 상품의 북한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남북한의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소가 접경지역을 비롯하여 서울과 평양 등 주요 도시에 설치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시장의 연계망 구축은 중장기적으로 부분별 시장통합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사업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물리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벨트를 구축한다는 것은 집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계망을 구축하고 경제적 소통과 연대를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반도 신경계구상의 3대 경제협력벨트는 환황해권에 산업·물류·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벨트를, 환동해권에는 에너지·자원·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벨트를, 접경지역에는 생태·환경·평화관광을 주제로 하는 협력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

‘환황해 경제협력벨트’는 개성·해주경제권, 평양·남포경제권, 신의주경제권을 북한지역 협력거점으로 조성하고 서울경제권과 평양경제권을 중심축으로 서해안 지역경제를 연계·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며 산업 협력과 교통·물류 통로를 중국대륙으로 확대시켜 나가고자 하는 계획이다.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는 나선·청진경제권, 원산·함흥경제권,

단천경제권을 협력거점을 조성하고 강릉·속초지역과 원산지역을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며 동해안지역의 관광·에너지·자원 연계망을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이다. ‘접경지역 평화벨트’는 DMZ지역과 민통선 주변지역을 남북이 평화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이 지역이 지니고 있는 생태·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평화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생태·평화관광지역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계획이다.

##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 과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은 이제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의 출발점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10·4정상선언을 중심으로 기존에 남북이 합의했던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과거에 남북 간 추진되어왔던 사업들을 재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와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경제제재가 완화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북 간의 경제협력은 경제제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우선적으로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남북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면서 언급하신 10·4 정상선언의 이행과 남북경협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공동조사·연구작업을 통해서 향후 남북이 함께 추진할 경협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와 북한경제의 수요를 적절하게 결합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서 자유롭게 투자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 인력의 고용과 관리에서 자율권을 강화하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협력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사업들 간의 조정과 조율, 지원 등을 담당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KINU 2018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